

주요 정책의 쟁점

(1998. 1.21~1998. 2.20)

| 일자 | 정책 | 주된 내용 | 수긍 의견 | 보완 의견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2.6 | 노사정 공동협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사업장에 고용 조정 허용 및 근로자파견 제도 도입 · 경영 상의 이유로 인한 M&A시에도 고용 조정 허용 및 Recall제 도입 의무화 · 교원 및 공무원 노조 허용 · 노조 정치 활동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 관련법 정비로 외국 자본 유치에 도움 · 기업 구조 조정 촉진 · 노사관계 선진화 및 국제 신인도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 조정 확대로 실업 증가 및 고용 불안 확산에 대한 대책 미비 ·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|
| 2.11 | 주식 시장 가격 제한폭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식 시장 가격 제한폭이 3월부터 12%로 확대됨 · 울 하반기중 15~20% 수준으로 추가 확대되고, 주가 급변시 매매를 잠시 중단시키는 매매 거래일시정지제도(서킷브레이커)도 도입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기능 향상 · 주식의 환금성 향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투자에 대한 위험 증가 · 담보 유지 비율이 상향 조정 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 미흡 |
| 2.12 | 새정부 100대 과제 발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·비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· M&A 활성화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· 공기업의 민영화로 경쟁 촉진 · 전문화된 대기업상 유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 분야가 40% 차지하여 경제 회생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 · 경제 각 분야에 시장 경제 원리 도입으로 자율화 폭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설치로 정부 기구의 비대화 초래 · 주택 보급률 100% 달성과 같은 잠미빛 약속 존재 |
| 2.16 | 정부 조직법 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산 편성 지침과 재정 계획 수립을 맡을 '기획예산위원회'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· 재정부 산하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할 '예산청' 신설 ·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 총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상 관련 조직 통합으로 공세적 통상 정책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작고 효율적인 정부' 이미 지 퇴색 · 경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의 부재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곤란 ·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의 분리로 인한 혼선 우려 |
| 2.17 | 정부·IMF 합의 경제 프로그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울 경제 성장률 1% 이내, 마이너스 성장도 용인 · 본원통화 증가율 상향 조정 및 금리의 단계적 인하 허용 · 물가 상승률 9%대 용인 · GDP의 0.8%내 재정 적자 허용 · 4월부터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화 증가율 상향 조정 및 금리의 단계적 인하 허용 성과 · 실업 대책 마련 등 추가적인 지출을 위한 재정 확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황의 장기화 · 대량 실업 및 고물가 지속 불가피 · 위기 극복의 최대 현안인 환율 안정 노력 필요 |
| 2.18 | 회계 기준 국제 수준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과 금융 기관은 1999 회계년도부터 시가회계제도를 도입 · 유가 증권 평가손과 대손 충당금을 100% 적립 · 은행구조조정 특별대책반 설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계제도의 불투명성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 불식 · 은행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시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·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|